

사회

# 공공장소 흡연 단속 광주시-구청 '엇박자'

### 市 작년 조례제정... 구청은 미적미적, 단속 못해

“충장로 같은 변화가를 지난 때 행인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아직도 버스 승강장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짜증납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대도시들이 최근 공공장소 흡연단속을 강화중인 가운데 광주는 조용하기만 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단속 관련 행정이 '엇박자'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5개 구청이 단속 범위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담은 조례를 만들지 못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물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광주시가 공공장소로 지정한 곳은 공원과 버스승강장 10m 이내, 500세대 이상 거주 아파트 단지 등 유통인구가 많거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조례가 시행된 올해 1월 이후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공공장소를 지정하면 단속에 나서야 할 각 해당구청에 시행 조례가 없는 탓이다.

현재 동구와 광산구·북구는 관련 조례의 의원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남구와 서구는 아직까지 제정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속에 나서야 하는데 인원을 새로 채용할 예산이 빠듯한 데다 조례 시행 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다.

여기에 흡연 단속이 읍주연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들다는 특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3~5분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가 있어 단속요원이 출동하더라도 이미 흡연자가 담배를 꺼버린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증거확보도 쉽지 않다.

실제 지난 4월 광주시와 5개 구청 관계자가 가진 금연조례 관련 간담회에서 구청 관계자들은 예산과 단속 부담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각 관련단체 홈페이지에는 공공장소 흡연단속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흡연 단속시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공장소 흡연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어린이 집 위생점검

광주시 북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14일 중흥동 한 어린이집을 찾아 식단표 준수 여부와 급식 상태 등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매곡동 이마트 입점 “안 된다”

### 광주지법 '북구청 건축허가 취소 적법'

광주시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관련해 영세상인들의 상권보호를 위한 북구청의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관사 김재영)는 14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 대형마트 입점 논란은 2010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샹들리에코리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북구청이 소상권인 피해와 반발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회사는 수차례

법적 다툼 등 우여곡절 끝에 9개월 뒤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가 애초 허가를 낸 업자로부터 부지를 매입, 우회입점 논란과 함께 도덕성 시비까지 부르는 등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감사에 나서 용도지역 부적합, 건폐율과 용적률 위반 등 건축법 위반을 적발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며 이마트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골목상

권' 붕괴 등을 우려해 왔던 지역 중소상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마트도 법원의 판단을 수용, 입점을 철회하도록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이번 판결이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입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항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방화 추정 영암 한옥마을 불

영암 한옥마을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영암군 군서면 서구리리박도(60)씨 집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박씨의 집 102㎡이 전소됐고 소방서 추산 1억여원의 피해를 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휴기자 Ish@

수학여행 교사 학생과 '쌌다' 도박

수학여행 교사 학생과 '쌌다' 도박

수학여행인 솔 교사가 고교생들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

○14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모 고교 학생부장 A교사(48)는 지난달 23일 밤 수학여행지인 강원도 설악산 숙소에서 순찰을 하다 도박 중인 학생들을 발견해 감을 자도록 종용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달래는 차원에서 5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수천~수만원의 관돈을 걸고 속칭 '쌌다'도박을 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한 학부모가 제보와 함께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은 조사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

/\*연합뉴스

### '부산교육감 옷 맞춘 광주 '드맹'의상실 어떤 곳?

## 상류층 여성 단골... 김운옥 여사도 다녀가

최근 임해경(여·64)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지역 대형 사립유치원장 2명으로부터 광주 소재 한 의상실의 고급 의류 3벌을 받은 혐의(본보 6월 14일자 6면)로 부산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의상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화제의 의상실은 광주시 남구 사동에 위치한 '드맹'이다. 디자이너로 출발한 대표 문광자(여·67)씨가 지난 1967년 문을 열어 올해로 45년째에 이른다.

광주지역에서는 두 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알려진 고급 의상실로, 수년전부터는 서울 청담동에서도 같은 브랜드 의상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중년 여성 체형에 맞게 맞춤형 옷을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의사, 교수, 기업인 계층의 단골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대선 전 광주를 방문했다가 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또 의상실 위치에 자리잡은 아트홀에서는 정기적으로 문화행사도 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2~3년 전 부산에 거주하는 문씨의 지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대형 사립 유치원 A원장에게 “광주의 한 의상실이 맞춤옷을 잘 만든다”고 권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원장은 종종 부산에서 드맹까지 찾아와 옷을 맞춰 입곤 했다.

A원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임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문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시는

분이 당선돼 기쁘다. 나중에 축하 선물로 옷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몇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11년 4월16일 오후 7시께 임 교육감과 함께 두 유치원장이 찾아와 흰색 재킷과 원피스 한 벌씩 한 세트(100만원 상당), 또 다른 재킷(80만원 상당)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3~24일 장성군 백양관광호텔 객실에서 관돈 20만~110만원을 걸고 속칭 '쌌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승려들의 일탈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전 조계사 주지 등은 신자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이 벌금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檢, 도박 파문 조계사 전 주지 등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하철호 부장검사)는 승려 도박 파문(본보 5월 11일자 6면)과 관련, 전 조계사 주지 등 180여명 원어치를 마쳤다. 계산은 유치원장들이 각각의 카드로 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14일 “당시 옷 세 벌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한 벌은 내가 그냥 선물했다”라며 “180만원이 결제된 이유는 A원장이 이전에 구입하고 지불하지 않았던 금액까지 한꺼번에 결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국선언 전공노 여수지부장

## 무죄 깨고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등 공무원 이외의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여수시지부장 이모(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의 집단행위”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신분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3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전 남 영 암

#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료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물건종별 : 의료시설  
■토지면적 : 9,517㎡  
■건물면적 : 7,305.36㎡(지하 1층, 지상 3층)

■입찰진행내용

구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과
1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차	2012. 06. 11	6,662,793,000원	유찰
3차	2012. 07. 23	5,330,234,000원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